

정치권 정부 개편안 기사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9일 정부조직개편안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폐지 대상 부처의 존치를 요청하는 결의문을 인수위에 제출하기로 한 반면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국회의 자율과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부조직개편에 협조할 것을 압박했다.

◇신당=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다른 나라와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며 "통일부는 정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되며, 분단국가로서의 역사적 특수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개편안을 비판했다.

신당 "개편안 졸속...부처 폐지 재검토 해야" 한나라 "노대통령 발언 국회 입법권 침해"

야 한다"고 개편안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독립돼야 할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것은 국제적인 망신이며, 방송통신위의 대통령 직속 기관화도 재검토돼야 한다"며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농업지원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농업진흥청의 폐지는 시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신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양부·농진청·산림청이 모두 존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인수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어제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은 국회의 자율권과 입법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한 뒤 "정부조직을 갖추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재를 갖춰 신뢰를 회복하는 게 경제살리기의 첫 단추인 만큼 신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신당도 이명박 정부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하고 협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거부하겠다는 이유는 자기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통폐합되는 이해관계자에 호소해서 덕을 볼까 하는 알락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행자위 공청회=이날 열린

공청회에서 권용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법안은 참여정부 시절 불필요하게 상향된 부처직제상의 위상을 균형적으로 하향화하고 유관 기능의 융합을 통해 효율적 정부운영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긍정평가했다.

반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재정부처 재편과 관련, "기획재정 부처와 금융위원회는 의회위계 이전의 재정경제원처럼 권한이 집중된 공통 조직이 될 것"이라며 "금융위 설치에 국제적 조류와 우리의 역사적 경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통일부 통폐합은 지난 정부 10년을 부정하려는 정략적 소산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폐합은 정신과 문화보다 경제와 산업을 노골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부 개편안 일부 후퇴... 점점 찾나

인수위 '원안 통과'서 '미세조정 가능' 입장변화 기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류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당초 "일체의 정치적 타협이 없다"며 원안통과를 고수해온 인수위의 입장이 "협상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바뀌는 조짐이다.

조직개편안의 '설계자'인 박재완 정부개혁TF 팀장이 전날 한 라디오에서 "인수위는 권고안을 냈고 협상은 당이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이어 추후영 당선인 대표변인인 29일 KBS1 라디오에 나와 "대통합민주신당과 긴밀한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밝힌 점은 이 같은 기류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원론적 차원의 언급으로도 볼 수 있지만 강행처리에 방점이 찍혀있던 이 당선인과 인수위

측이 협상론 쪽으로 기울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인수위측은 지난 16일 조직개편안 발표 직후만 해도 정치적 타협설이 나돌자 "협상은 없다"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이런 기류변화는 일단 원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내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총력 저지를 버리는 상황에서 무작정 원안대로 밀어붙였다가는 새정부 출범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여기에는 범여권에 대한 고도의 대응전략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범여권 세력의 양대축을 이루는 대통합민주신당과 노무현 대통령을 '분리'해냄으로써 조직 개편안 처리는 물론 추후 정국운

영에서 주도권을 확보해나가기 위한 포석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타협의 범위다. 신당측은 통일부와 여성부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수위측이 어느 정도 수용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아직까지 통일부를 통폐합시켜야 한다는 이 당선인의 의중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인수위 주변에서는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선에서 정치적 타협이 시도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통일부가 과거 10년 정권의 '상징부처'로서 범여권의 반대가 워낙 거센데다 여론도 통일부 통폐합에 반드시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통일부 존폐 여부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李당선인 靑에 정부 개편안 취지 설명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입태회 비서실장을 통해 청와대측에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태회 실장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을 만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비판하며 "새 대통령이 서명 공포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밝힌 직후 이 당선인이

청와대에 개편안에 대해 설명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입태회 실장과 문재인 실장이 만났다"고 확인한 뒤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대변인은 "일 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청와대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당선인은 국민과 국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념의 틀에 갇혀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대선패배에 대해 반성한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조보수' 김용감 "통일부 존속이 옳다"

'원조 보수' 한나라당 김용감 의원은 29일 정부조직법 개편안과 관련,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좌파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자제를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해왔다"며 "많은 고민을 거듭한 결과, 통일부가 원래 설립 취지대로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존속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그의 이 같은 언급은 그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협력 자제에 대해 '저자세, 눈치보기, 퍼주기' 등 강경 일변도로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김 의원은 "개인적 소신을 내세워

당론을 반대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은 국민여론과 정치적 의견을 결정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실용과 효율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에 통일부 통폐합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민족의 통일문제는 실용과 효율의 문제가 아닌 헌법정신과 통일을 위한 국민적 여망과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인수위 너무 성급하면 국민 신용 잃어"

李 당선인 후보시절 선대위원장 박찬모 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선대위원장을 지낸 박찬모(73·사진) 전 포항공대 총장이 최근 인수위의 행보에 대해 "너무 성급하면 국민의 신용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박 전 총장은 29일 조선대에서 열린 '광주·전남 미래 신산업 비전 포럼'(위원장 이운배 조선대 교수)에 참석, '북한의 IT 현황과 남북교류 협력방안'을 주제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수위가



박찬모 전 선대위원장

다들 생각한 뒤 행동에 나서는데 정치인들은 일단 아이디어가 있으면 관철부터 시키려는 것 같다"며 "그러면 (국민들의) 신용을 잃게 마련이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은 광주 문화수도조성위 폐지 등 새정부의 호남정책과 호남 소외 우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우선 걱정부터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문제점과 해결책을 조목조목 따져본 뒤 건설적 투트를 통해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운하 검증 국민위 구성하자"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 제안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한 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 "각계의 대표로 '한반도운하검증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경제성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본 뒤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반도 운하는 그저 하나의 대규모 토목사업이 아니라 국토는 한 번 파

헤쳐지면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만약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신당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 "신당은 신정부 출범에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며 "우리는 기획예산처 폐지에 동의하며, 국정홍보처 폐지도 새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도 필요하고 비대해진 청와대와 총리실을 축소하는 것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울 02-361-8111 / 대구 054-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발신 전국수석 2명 배출(현태원 남, 박, 장영아 여 2명)
개강 2월 1일 (매주) "동영상 무료" **국비무료**
새로 행정고시학원 서울 02-361-8111 / 대구 054-29-8111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개강 **2월 1일**
주택관리사
첫전도시적반
광주고시학원 서울 02-361-8111 / 대구 054-29-8111

건물 매각
 부동산 전문매각 서비스
 017-622-8763

바이오싱크케어
 생체유체역학 기반의 건강관리
 010-9701-1111